

# 사회민주주의와 정치공간 유럽

## - 새로운 강령논의의 불가피성

데틀레프 알버스(Detlev Albers) 독일 브레멘대학 교수, 정치학

번역 : 박장현 브레멘대 박사과정

### 블레어/슈뢰더 제안문에 대하여

제안문이란 무엇인가를 움직이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익숙한 사고방식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내용을 담고서 충격요법으로 이루어지는 제안은 다분히 논쟁을 유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럴 경우 제안에 대한 논박은 불손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려지는 바이다. 그리고 제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대안의 내용에 못지 않게 가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같은 논쟁은 양편이, 그러니까 “현대화론자들”과 “전통주의자들”이 동시에 패를 내보일 때 비로소 생산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물론 양쪽이 옛날부터 널리 알려져 있는 일반론에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비록 그것이 유럽의회 선거 직전에 발표되어 이 선거에서 좌파가 참패하는데 일조하기는 했지만, 아무튼 토니 블레어와 게하르트 슈뢰더의 제안문을 성공적인, 그리고 요긴한 도발이라고 본다.

유럽 사민주의 내에서 가장 비중있는 두 현대화론자들이, 만약 둘이 모든 일을 결정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우리는 그들의 제안문이 발표되고난 뒤에야 비로소 알게되었다. 두 사람은 제안문을 당내 토론을 거치지 않은 채 유럽연합 두 강대국의 매스컴에 동시에 발표하였다. 관례에 어긋나는 이같은 절차만 하더라도 벌써 의미심장한 일이라 할 것이다.

## 역자 불인 말

토니 블레어와 앤소니 기든스는 이른바 '제3의 길'이 유럽의 모든 좌파들에게 보편타당성을 가진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유럽 대륙의 좌파들은 이 길을 보편타당한 길이라고 인정해주지 않고 있으며, 영국의 특수한 길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중반까지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유럽의 좌파들은 제3의 길에 대해서 별로 관심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었으며, 프랑스 좌파가 보여준 관심도 긍정과 동조의 관심이 아니라 부정과 비판의 관심이었다. 독일에서도 이때까지는 정치계 및 지식사회에서 제3의 길이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1999년 6월에 영국 수상 블레어와 독일 수상 슈뢰더가 이른바 「유럽 시민주의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블레어/슈뢰더 공동제안문을 발표하고부터는 사정이 조금 달라졌다. 대륙의 좌파들은 이 제안문을 이른바 「앵글로아메리카 모델」이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사전포석으로 이해하였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반격이 가장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프랑스이다. 독일에서도 이때부터 시민당 내 반(反)슈뢰더 그룹을 중심으로 제3의 길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었다.

여기에 번역된 데틀레프 알버스(Detlev Alber)의 글은 독일에서 제3의 길에 대하여 반격의 포문을 열고 있는 글들 중의 하나이다. 원문은 본래 독립된 두 편의

두 사람은 다른 나라의 좌파들이 동참하기를 은근히 종용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이 제안문이 다루고 있는 대상과 겨냥하고 있는 수신자는 두 국가, 즉 영국과 독일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영국이라는 주식(主食)에 독일이라는 양념을 조금 친 것에 불과하며, 유럽에 대한 관심은 뒷전에 있다. 게다가 제안문은 어려운 국제정치 용어들이 아니라 고맙게도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국내정치 용어들만 담고 있다.

이 제안문에 담겨 있는 정치목표들은 너무나 원론적이고 선언적이어서 아무도 반대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이다. 도대체 누가 "공공행정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구조를 개선"하는 일에 이의를 제기할 것인가? "직능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지 않을 시민주의자가 어디 있는가? "노동성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사회보장체계"를 누가 거부할 것인가? 이같은 목표 목록에 대해서 결함이나 누락을 따지고 드는 일은 세계적인 일로 보인다. 아마 두 저자가 조만간 이런저런 보충판을 내놓을 테니 기다려 보자.

글로 되어 있는데, 번역자가 저자와의 상의를 거쳐서 하나로 합치면서 재구성하였다. 이때 첫 단락 "블레이어/슈피더 제안문에 대하여"는 99년 7월 3일자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 신문에 「메뉴: 영국식 도발과 독일식 양념」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특별기고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리고 제2장에서 제4장까지는 미발표 원고 「사회민주주의와 정치공간 유럽」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원고의 일부는 상기 신문 11월 29일자에 게재되었다. 데틀레프 알버스(1943년생)는 브레멘 대학 정치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시민당 근본가치 위원회 위원인 동시에 브레멘 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시민당의 대표적인 정치이론가들 중의 한 사람으로 70년대에는 안토니오 그람시와 오토 바우어를 이론적으로 발굴 및 재조명하기도 하였다.

## 출 처

Albers, Detlev (1999), Als Hauptspeise: britische Provokation mit deutschen Zutaten, in: Frankfurt Rundschau, 03. 07. 1999

Albers, Detlev (1999), Sozialdemokratie und der Handlungsraum Europa. Über Not und Notwendigkeit der neuen Programdebatte, Manuskript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척도에 따라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재어보는 일은 지금이라도 요긴한 일일 것이다. 첫째, 제안문에 담긴 목표와 수단을 총동원할 경우 우리사회의 모순에, 다시 말해서 세계화·다국적화·디지털화된 최신 양식의 자본주의에 대응하기에 충분한가? 둘째, 블레이어와 슈피더가 제안하고 있는 길은 최소한 그 방향만이라도 사회민주주의의 근본가치, 즉 자유·정의·연대를 실현하는 쪽으로 쏠려 있는 길인가? 혹시 그들은 우리의 근본가치들을 궁극적으로 시장상황의 종속변수

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애석한 일이지만 더 이상의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이처럼 제안문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자칭 현대화론자들의 기본원칙은 "신자유주의적 바탕에 사회보장의 양념을 가미한다"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비판만으로는 아직 대안이 되지 못한다. 제안문의 핵심태제는 다음과 같다. "국가기구는 노를 저어서는 안되고 키를 잡아야 한다. 통제해서는 안되고 촉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제해결책들은

네트워크를 이루어야 한다." 블레어와 슈뢰더의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 간에 여기에 대하여 독자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는 좌파는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이다. 80년대 초에 프랑소아 미테랑(前프랑스 대통령, 1981~1995 재임·편집자)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직에 올랐다. "다국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유화하자!" 이 구호는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다. 그렇다고 국가기구의 필수불가결한 제어기능을 고작 국가기구가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채팅하는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것도 또한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그렇다면 어떤 국가기구, 어떤 사회가 바람직한가? 이것은 사회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묻는 고전적인 질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블레어/슈뢰더 제안문은 공동복지 및 공동체성에 대한 몇 마디 미사여구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유럽의 좌파는 새로운 세기를 맞아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가? 유럽의 좌파는 다름 아니라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세계경제를 사회연대적 및 환경친화적으로 제어하는 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일은 토대, 즉 작업장과 기초자치체로부터 시작해서, 지역과 개별국가 차원을 거쳐서, 최고 상층부, 즉 초국적기업과 국제기구의 최고기구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수행되어야 한다. 이때 유럽 좌파에게 유리한 점

은 그들이 유럽연합(EU)이라고 하는, 또는 좀더 가까이로는 현재 좌파가 주도하고 있는 유럽통화연합(EWU)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역사적 실험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좌파는 널리 맹신되고 있는 경제의 자동운동에 대하여 정치적인 교배를,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정당성이 부여된 교배를 채우는 일에 이 기구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제어기구의 세부장치들은 개별주권국가들이 이 기구들에 잠시 저당해 놓은 주권을 이용하는 식으로 조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정 세부장치들이 이런 또는 저런 나라에서 그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유럽 차원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일국적 먼지를 떨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예컨대 90년대 중반에 유럽연합에서 제정된 "유럽종업원평의회 기준"은 이미 이같은 과정을 거쳤다. 그렇지만 유럽종업원평의회들이 끝목할만한 중간단계 역할을 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엄청난 산소공급이 필요하다. 현재 유럽에서는 일국적기업 내에서의 공동결정으로부터 초국적기업 내에서의 공동결정으로 틀이 다시 짜지고 있는 중인데, 이 과정이 완료단계가 아니라 시작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갈무리하는 좌파가 극히 드물다. 한편, 독일에서는 "고용연대"가,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폴더-시스템”이 지역 및 전국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곳곳에서 전략적-이론적 혈액부족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조약 안에 사회민주주의의 필적을 많이 남긴다고 해서 별로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 암스테르담 조약에 채택된 “유럽공동협정”은 엄청난 열광과 더불어 추진된 기획이었다. 그렇지만 이 협정은 프랑스 좌파의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구속력 없는 문구로 남아 있으며, “노사간의 지속적인 대화”(Blair/Schröder 1999)의 수준으로 위축되어버렸다. 유럽중앙은행과 나란히 일종의 유럽경제정부를 건립하자고 하는 리오넬 조스팽의 디자인은 지금까지 거의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블레어/슈뢰더 제안문에 담겨 있는 “긴밀한 상호조정”이란 모든 것을 뜻할 수도 있고, 아무 것도 뜻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말이다. 제안문의 두 저자 중 한 사람은 이미 유럽통합연합 안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긴밀한 상호조정” 이상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모든 사정들은 유럽의 좌파가 해명해야 할 일이, 지금까지 한번도 진지하게 측량되지도 않은 채, 얼마나 많이 산적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블레어/슈뢰더 제안문은 그들의 시야를 훨씬 넘어서는 지점들을 포착할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

다. 그들이 이 점을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이점이 그들의 공적이라면 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1989년 이후의 새로운 국면

20세기의 마지막 20년은 상호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두 가지 거대한 사건에 의하여 각인되었다. 첫번째 사건은 자화자찬하던 국가사회주의라는 대항세계가 종말을 고한 것이다. 이 사건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부터 시작되어서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더불어 완료되었다. 두번째 사건은 세계경제가 역동적으로 지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현상은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사건은 단기적으로 신자유주의 및 보수주의 사상이 엄청나게 범람하도록 만들었다. 이 이념공세는 특히 서방 선진국들의 공공여론과 정당들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깊숙한 흔적을 남겨두고 있다. 물론 유럽의 시민주의 및 사회주의 정당들이라고 해서 이로부터 무사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들 좌파 정당들은 성급한 “사망선고”(Dahrendorf 1983)가 무색하게 90년대 말에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미국의 경제학자 에드워드 루트윅은 신자유주의 신조를 다음과 같이 공식화하면서, 이 공식이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를 가릴 것 없이 모든 국가들에 유효하다고 선언한 바 있다. “사영화 + 탈규제화 + 세계화 = 터보

자본주의 = 복지향상. 전세계의 모든 사업가들은 이 공식에 동의하고 있다. 단지 몇몇 나라의 극소수 인사들만이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일 뿐이다” (Luttwak, 60쪽).

이 공식을 구성하고 있는 각개 항목은 사실상의 경향을 가리키는 동시에 완벽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 공식의 어느 항목도 단순히 “아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또 그런 식으로 해결해서도 안된다. 바로 여기에 현재 좌파들이 안고 있는 딜레마가 있다. 이 딜레마는 독일의 시민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좌파들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다.

우선 복지의 향상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좌파는 항상 딜레마와 직면해왔다. “터보자본주의”는 정보화시대에 즈음하여 경제구조가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음을 실감나게 표현해주는 말이다. 터보자본주의에 맞서서, 예컨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등 상대적 및 절대적 한계를 설정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다. 그렇지만 경제의 구조전환 그 자체를 거부하는 일은 좌파의 본분과 어울릴 수 없는 일이다. 세계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새로운 세기를 맞아 좌파는 세계화를 조형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이 일은, 일선 지방정치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난제들을 포함하게 될 것

이다. 그러나 세계화로부터 자신을 절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울리히 벡(1998)과 앤소니 기든스(1999)가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세계화 과정은 전혀 제어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서 민족국가의 경계가 잠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흔히 기대 밖의 지역주의 또는 지방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도 좌파의 모든 사업영역에 있어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끝으로 사영화와 탈규제화를 보자. 이 두 가지는 지난 수십년 동안 빈번히 좌파와 특히 노동조합을 깔아뭉개는 장갑차로 투입되었다. 유럽대륙에서 관료공산주의가 몰락한 후 진동추가 한 쪽 극단으로부터 다른 쪽 극단으로 흔들려 갔다는 사실은 어쩌면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현재 유럽연합의 많은 나라들에서 그러하듯이, 좌파가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정권을 재탈환한 곳에서조차도 단지 사영화의 속도를 늦춘다거나, 이미 기획 또는 완료된 탈규제 조치를 제한하는데 머물고 있을 뿐, 어느 곳에서도 전체 진행과정을 반전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분명한 사실은 다름 아닌 터보자본주의 및 세계화, 또는 좀더 가까이 보자면 유럽경제통화연합(EWU)의 출범이

새로운 행위공간들을 창출하였고, 바로 이 행위공간들은 좌파에게도 지금까지 진행된 신자유주의 조처들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때 무엇보다도 골치를 썩이는 문제는 경제통합연합에 속하는 민족국가들이 그들의 통화정책 주권을 유럽중앙은행에 넘겨준 지금 어떻게 재정정책상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한편, 국영기업 또는 공공기업을 사영화시키고 나서도 국가기구의 사결정 비토권을 계속 보유하는 일은 국가의 경제입지를 유지하려는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전제경제를 재조형하는 전략적인 지렛대로서 생산수단의 국영화, 공기업화 또는 사회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 곳에도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는 현재 그리고 장차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자유·평등·연대”라고 하는 근본가치를 구체화하는데 있다. 노베르토 보비오(1999)가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다름 아닌 평등원칙의 능동적 자기화야말로 예나 지금이나 좌파를 우파로부터 갈라주는 가장 중요한 경계선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승자와 패자, 불평등, 그리고 계급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시장의 구성원리에 대하여 미시적인 차

원으로부터 전지구적 차원에까지 이르는 지식이 여기에 보태져야 한다. 그리고 다시금 이로부터 귀결되는 과제는 터보 자본주의를 동결·순화·결박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과 연대하는 일이다. 이때 물론 우리 자신의 고유한 추동 동기를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 유럽 다차원 민주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답

독일사회민주당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불가피해진 유럽경제연합의 창설을 추진하고, 유럽합중국의 설립을 추진하며, 이를 통하여 모든 대륙 모든 인민들의 이해와 연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도대체 누가, 21세기의 지구화된 세계에서 유럽연합이 수행할 역할과 책임을 이보다 더 명쾌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진정 미래에 대해서도 유효한 이 구절은 1925년에 제정된 하이델베르크 강령에 담겨 있는 구절이다. 바로 이 구절에 구체적 내용을 채우는 일이야말로 새로운 강령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로 될 것이다.

“경제민주주의”라는 구상이 사회민주주의 근본강령의 핵심으로서의 본래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구상을 광범위하게 계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경제민주주의의 두 가지 기본 착상은, 첫째 경제의 기본체제를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고, 둘째 경제 및 사회 문제를 모

든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기본착상을 현실상황에 부합되도록 만드는 동시에 그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 터보자본주의가 팽창하는 속도와 국가기구의 제어능력이 확장되는 속도 사이의 경쟁에서 후자는 절망적 열세상태에 있다. 경제민주주의의 본래 구상에 따라라면 국가기구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보자면, 자본에 맞서는 보루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장치이다. 그런데 현재 바로 이같은 국가기구가 침식되는 속도가 국제적 제어장치가 형성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토니 블레어와 게하르트 슈뢰더는 현대적 국가기구의 최고원칙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 바 있다. “국가기구는 노를 저어서는 안되고 키를 잡아야 한다. 통제해서는 안되고 촉발해야 한다”(Blair/Schröder 1999). 이 선언은 아직 경제체제 및 사회보장체제 속에 남아 있는 공공기구들을 지금까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철수시키라는 주문에 다름 아니다.

그렇지만 유럽연합 안에서는, 최소한 아직까지는, 사정이 다르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 산업국들이 도처에서 세계경제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다. 개발도상국들과 후진국들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국가들에 비추어 볼 때 다름 아닌 유럽연합 관료주의라고 비난받고 있는 것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

지게 된다. 앞서 말한 국가들에는 바로 이 유럽연합의 각종 기구들에 해당되는 보호막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보호막은 거꾸로 각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새로운 일국 내적 조형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만약 일국적 국가기구와 유럽연합의 기구가 공동으로 감독 및 통제 권한을 보유한다면 예컨대 지방발전소의 사영화 또는 “거대 파트너”와의 통합에 따른 후유증들을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가격의 인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세부적 해결방식은 다르겠지만 전화, 철도, 우편, 물류 영역에 대해서도 “시장과 제어”의 새로운 조합양식을 창출해낼 수 있다. 이처럼 세계최고의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통합시장의 규모를 바탕으로 우리는 유럽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본집중과정에 맞서서 일국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던 여유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는 유럽연합 차원에 민주주의, 공공사회 그리고 통제권한으로 구성된 대항권력이 존재해야 하며, 이 대항권력이 새로운 규모의 경제권력에 맞서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한다. 유럽중앙은행과 나란히 일종의 “유럽경제정부”를 설립하자는 프랑스 좌파의 요구는 바로 이 점을 겨냥하고 있다. 유럽경제정부는 예컨대 암스테르담 조약에 담긴 고용정책 우선 조항을 구



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기구이다. 그렇지만 이 제안은 극도로 중앙집중적인 기구들을 설립하지는 것이 아니다. 이 제안은 전체 유럽을 포괄하는 다차원 민주주의(Mehrebenendemokratie)를 기반으로 하여 통합적 통제체제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가장 강력한 개별적 이해관계들에 대해서도 맞설 수 있는 “정치적 회복”(Eppler 1998)을 보장하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내적 및 외적으로 어마어마한 저항들을 극복해야만 할 것이다. 예컨대 중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을 유럽연합의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일만 하더라도 유럽연합의 신규설립에 비금갈 정도의 재조형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일을 수행함으로써 유럽연합은 다른 어떤 자기 본연의 과업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미래의 “세계시민 민주주의”(Giddens 1999)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은 일에 다름 아니며, 우리의 하이델베르크 강령에 담겨 있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모든 대륙, 모든 인민들의 이해연대에 기여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 경제민주주의와 유럽 시민사회

현재 그리고 장래에 유럽에서 경제에 대한 정치의 제어잠재력을 모두 가동시킨다고 전제해보자. 또한 유럽의 국가기구들이 여러 차원에서 목적의식적으로 협력한다고 가정해보자. 끝으로 모든 국

제정치기구들, 특히 국제연합(UN)이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설정해보자. 이런 일이 모두 이루어지더라도 유럽차원의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내적 및 외적 요구는 여전히 막대한 것이다. 자본주의에 따른 병폐는 유럽차원에서 경제민주주의를 통하여 대규모로 부의 재분배, 사회정의와 기회균등 프로그램들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현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만 꼽아 보더라도, 우선 향후 유럽연합 내에서의 소득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 문제와 전지구적 환경정책에 대한 책임도 커질 것이며, UN에서 평화유지를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도 커질 것이다. 더구나 (결코 완전히 걸들여지지 않는) 터보자본주의라는 호랑이가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오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향후의 근본강령은 경제의 효과적인 제어장치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공동결정에 대해서도 핵심적 지위를 부여해야만 한다.

정보사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모든 척도들을 뒤엎어버리고 있다. 정보사회는 개인들의 조직역량을 무한대로 확대시켜준다. 완벽하게 디지털화된 세계에서 특정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초국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은 과거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쉬운

일이다. 지난 수십년 사이에 거의 무(無)로)부터 생겨난 비정부 사회단체들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순발력에서 교회, 노동조합, 정당 등 전통적인 대중조직들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사이버 스페이스 내에서의 세력과 실제 사회 내에서의 세력 사이의 차이가 사라지고 있다. 모름지기 "거대 정치공간 유럽"이란 현재 15개이고 조만간 25~30개에 달하게 될 민족사회들을 하나로 합쳐 21세기에 제2의 "합중국"을 건설한다는 역사상 유일무이한 시도이다. 이 실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국의 경계를 넘어 전유럽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 조직들 및 단체들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때 한 가지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즉, 전통적 조직들과 비정부 사회단체들을 두 개의 기둥으로 하는 생명력 넘치는 유럽시민사회의 건설이 없이는 유럽차원에서 경제에 맞서는 정치의 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일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럴 것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전체 조직사에 걸쳐서 노동조합은 주로 일국적 수준에서 자본에 맞선 강력한 대항권력임을 입증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유럽화는 그 자체로서 이미 노동조합의 근본적 변환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미 수백만에 달하는 조합원들

이 기업들의 초국적 집중과정과 직접 충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병행하여 텔레워킹(teleworking), 홈워킹(home-owrking) 뿐만 아니라 컴퓨터 자동제어 생산과정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적응체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형식에서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유럽화 계명은 유럽경제통합연합의 출범과 더불어 매일같이 노동조합을 재촉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병행하여 노동관계의 탈집중화 및 개별기업화 경향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어서, 특히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행위영역, 즉 협약정치 영역에서도 이것이 감지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렇지만 이처럼 유럽의 모든 노동조합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압박은 또한 기존의 분단신들을 함께 넘어설 수 있는 기회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90년대 중반에 제정된 「유럽중업원평의회 기준」은 서로 다른 노동관계 문화들 사이에 체계적인 상호학습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최초의 토대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기준은, 노동자들의 기업내 경영참여형식들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방면에서 계속 발전될 필요가 있다(Leminsky 1999). 「기준」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거의 발전된 적이 없는 독일식 공동결정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모델은 기업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공동결정으로, 위에서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언급한

것처럼, 노동관계를 개별기업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단체협약과 공동결정이 점점 더 뒤엎히게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Mitbestimmungskommission 1998). 그렇지만 초국적기업 내에서의 공동결정을 통하여 서로 다른 유럽 국가들의 노동조합들이 참여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지게 된

다. 아마 공동결정은 단지 <유럽기업체제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입장을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데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전략적으로 더 의미심장한 일은 공동결정에 힘입어 유럽 경제민주주의를 구성할 또 하나의 요소, 즉 “전체 경제의 민주적 제어”가 뒤이어서 시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

## 참고문헌

- Albers, Detlev (1998), Sozialdemokratische Zukunft — Arbeit an der Vision aus eigener Kraft, in: Josef Cap, Heinz Fischer (Hg.), Rote Markierungen für das 21. Jahrhundert, Wien 1998, S.13-29
- Beck, Ulrich (1998), Was ist Globalisierung?, Frankfurt/M.
- Blair, Tony / Schröder, Gerhard (1999), Der Weg nach vorne für Europas Sozialdemokraten, Bonn
- Bobbio, Norberto (1994), Rechts und Links. Gründe und Bedeutungen einer politischen Unterscheidung, Berlin
- Dahrendorf, Ralf (1983), Die Chancen der Krise. Über die Zukunft des Liberalismus, Stuttgart
- Eppler, Erhard (1998), Die Wiederkehr der Politik, Frankfurt/M.
- Giddens, Anthony (1999), Der dritte Weg. Die Erneuerung der sozialen Demokratie, Frankfurt/M.
- Leminsky, Gerhard, Mitbestimmung. Von der Gegenmacht zur Mitgestaltung und zum Industriellen Bürgerrecht — ein europäischer Lernprozess (im Erscheinen)
- Luttwak, Edward (1999), Turbo-Kapitalismus. Gewinner und Verlierer der Globalisierung, Hamburg, Wien
- Mitbestimmungskommission (1999), Mitbestimmung und neue Unternehmenskulturen — Bilanz und Perspektiven, Gütersloh